

전남광주 첫 조직개편 후유증 지속...지역 정치권 공방

민주 의원들, ‘당론 찬성’ 진보당과 민 시장 간담회 지적 “정치적 거래·선심성 챙기기 우려” 등 SNS 비판 잇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첫 조직개편안이 가까스로 의회 문턱을 넘어서 가운데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다.

단 2표 차이로 의회를 통과한 만큼 당론으로 찬성표를 던진 진보당과 민형배 시장의 회동을 두고 ‘정치적 거래’라는 반응까지 나오는 등 조직개편과 관련한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30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박문옥 광주 특별시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3)은 이날 SNS를 통해 10월 1일 예정된 진보당 소속 특별시의원과 민형배 시장의 간담회를 거론하며 우려를 표했다.

박문옥 의원은 “농어촌의 절박한 현실과 현안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해 아쉬움이 컸던 조직개편안에 당론으로 찬성표를 던진 직후라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정이 끝나기 무섭게 파크골프장 조성, 복합문화센터 건립, 공공기관 유치 등 민원을 시장에게 직접 건의한다면 시기적으로 주민들과 시민사회에 뜻하지 않은 오해를 부르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객관적 공모 절차와 공정성이 기본인 공공기관 유치가 자칫 정치적 거래나 선심성 챙기기라는 시선을 받아서는 곤란하다”고 꼬집었다.

농수산위원장인 류기준 의원(민주당·화순2)도 SNS를 통해 “이번 조직개편 과정에서 농수산어업 위상이 약화된다는 우려를 위원회가 제기했으나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그런데 진보당 의원 5명은 모두 찬성했다. 농민과 노동자, 서민을 대변해왔다는 그들의 선택의 이유를 농민과 어민 앞에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민형배 시장에 대한 비판도 일었다.

일자리경제위원장이진호건 의원(민주당·곡성)은 SNS에 “민 시장님, 진보당 의원들과 간담회 한다고 하던데, 민주당 의원들이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먼저 만나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적었다.

반대표를 행사한 민주당 의원들과의 간극을 우선 좁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진보당 소속 박형대 의원(장흥1)은 “정치를 넓게 봐야 한다”며 “민 시장과 진보당의 간담회는 8월부터 추진해 온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당론으로 조직개편안에 찬성한 것은 민 시장에 책임 있게 일하라는 뜻이었다”며 “간담회에서는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시행과 생활임금 확대 등 공동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의회는 지난 18일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첫 조직개편안을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46표, 반대 35표, 기권 8표로 통과시켰다.

당시 진보당 소속 의원 5명 모두 당론으로 찬성표를 던지면서 찬성 기준인 44표를 2표 차이로 가까스로 넘겼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광산구, 2026년 개인정보 보호 캠페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개인정보 보호의 날을 맞아 30일 구청 1층 로비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직원들의 보안 의식과 실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6년 개인정보 보호 캠페인’을 실시했다.

서삼석 “연안여객선 기항지 75% 여객 터미널 없어”

전체 기항지 57%는 탑승대기실도 못 갖춰 “섬 필수인프라 정부가 시설개선 지원해야”

섬 주민의 일상과 이동을 책임지는 연안여객선 기항지 상당수가 여객터미널은 물론 기본적인 탑승대기실조차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장·사진)이 30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 받은 ‘섬 지역 여객 편의시설 현황’에 따르면, 전국 322개 여객선 기항지 가운데 여객터미널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240개 소로 전체의 75%에 달했다.

여객터미널이 없는 기항지는 전남광주가 160개소로 가장 많았고(전체 미설치 기항지의 67%), 이어 경남 28개소, 충남 20개소, 인천 17개소, 전북 10개소, 기타

지역 5개소 순이었다.

특히 전체 기항지의 57%는 여객선 탑승대기실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나 섬 주민과 이용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여객선을 대중교통수단으로 규정하고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여객선은 미연륙 섬 주민 8만6000여명의 생업과 일상을 지탱하는 필수 교통수단이며, 매년 약 1300만명의 국민이 여객선을 이용해 섬을 찾고 있다.

현장의 여객 편의시설은 매우 열악



하다.

일부 기항지에서는 낡고 좁은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를 탑승대기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송전탑 바로 아래에 대기실이 설치된 곳도 있다.

또 지붕과 창문 없이 사방이 개방돼 비바람을 피하기 어렵거나 전기시설이 없어 냉난방조차 할 수 없는 시설도 확인됐다.

특히 고령자가 많은 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면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과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관리체계도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

여객선 업무를 총괄하는 해양수산부는 기항지별 여객 편의시설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동안 섬 지역 여객 편의시설에 대한 별도

의 관리·개선 지원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여객선은 법에서 정한 대중교통수단이자 섬 주민에게는 생활과 생존을 이어가는 필수 교통수단”이라며 “기항지 4곳 중 3곳에 여객터미널이 없고, 절반이 넘는 곳에는 탑승대기실조차 없다는 것은 섬 주민의 이동권과 안전이 여전히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객선 대기실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섬 주민과 국민 누구나 안전하게 여객선을 이용하기 위한 필수 교통인프라”라며 “해양수산부가 전국 기항지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노후·위험시설 개선과 대기실 설치를 위한 정부 지원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송형곤 광주특별시의의회 의장, 지방분권 강화 ‘광폭 행보’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 참석 공공기관 이전 촉구 건의안 제출

송형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의회 의장이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30일 광주특별시의의회에 따르면 송형곤 의장이 최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주장을 펼쳤다.

토론회는 경기도의회·국회입법조사처·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민국시도 의회연합회와 행정안전부 등이 후원한 행사로, 강득구 국회의원과 전국 시도의회의장 등이 참석



송형곤 의장이 최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했다.

했다.

이 자리에서 송 의장은 “지방행정의 기능과 집행부의 권한은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지만,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이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의 권한은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다”며 “지방의회

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지금이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 낼 적기다”고 발언했다.

이어진 강득구 국회의원의 기초강연 질의·답변 시간에는 지방정치의 현장 경험이 중앙정치로 이어질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송 의장은 “지방의원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온 사람들”이라며 “이러한 현장 경험을 가진 지방의원들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면 지역의 목소리와 요구가 중앙정치와 국가정책에 보다 충실히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송형곤 의장은 “혁신도시 외에도 지역 특화산업과 발전전략에 부합하는 지역으로 공공기관 이전이 가능하도록 이전 대상과 입지를 유연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완화하고 실질적인 균형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당·곡성)은 SNS에 “민 시장님, 진보당 의원들과 간담회 한다고 하던데, 민주당 의원들이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먼저 만나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적었다.

반대표를 행사한 민주당 의원들과의 간극을 우선 좁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진보당 소속 박형대 의원(장흥1)은 “정치를 넓게 봐야 한다”며 “민 시장과 진보당의 간담회는 8월부터 추진해 온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당론으로 조직개편안에 찬성한 것은 민 시장에 책임 있게 일하라는 뜻이었다”며 “간담회에서는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시행과 생활임금 확대 등 공동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의회는 지난 18일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첫 조직개편안을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46표, 반대 35표, 기권 8표로 통과시켰다.

당시 진보당 소속 의원 5명 모두 당론으로 찬성표를 던지면서 찬성 기준인 44표를 2표 차이로 가까스로 넘겼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은 민 시장에 책임 있게 일하라는 뜻이었다”며 “간담회에서는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시행과 생활임금 확대 등 공동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의회는 지난 18일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첫 조직개편안을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46표, 반대 35표, 기권 8표로 통과시켰다.

당시 진보당 소속 의원 5명 모두 당론으로 찬성표를 던지면서 찬성 기준인 44표를 2표 차이로 가까스로 넘겼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광주 맛 여행 떠나자...미식주간 내일 개막

11일까지 10일간 도심서 미식 체험·도보 여행 운영 20% 할인 70개 업체 참여

광주지역의 역사·문화·자연을 미식 체험과 연결해 광주를 찾는 여행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하는 자리가 준비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오는 2일부터 11일까지 열흘간 광주권역에서 ‘2026 광주미식주간(I-Gourmet, 아이고메)’을 운영한다.

이번 미식주간은 남도의 풍요로운 식재료를 광주만의 개성있는 식탁으로 재해석하고 음식으로 엮힌 이야기를 따라 도심 골목과 문화공간으로 발걸음 넓힌 게 특징이다.

개막행사는 오는 2일 오후 6시 동구 오가현에서 ‘개시(開題) : 광주, 첫 손가락을 들다’를 주제로 열린다. 남도 식재료를 활용한 음식 시연과 전통주 소개로 ‘산지에서 식탁까지 이어지는 미식의 이야기’를 선보인다.

이어지는 토크쇼에는 음식 칼럼니스트이자 셰프인 박찬일씨, 남파고택 차주부 김선경씨 등 음식 전문가들이 참여해 남도음식의 전승과 미식관광의 발전 방향을 이야기한다.

행사 기간 동안 ‘미식 할인워크’에는 블루리본 연계 할인매장 42곳과 양림스퀘어 크 참여업소 31곳 등 광주권역 요식업체 71곳(중복 2곳 제외)이 참여한다.

식당과 주점은 지정 메뉴를 10% 이상, 카페와 제과점은 20% 이상 할인한다. 참



여업소와 행사 정보는 광주미식주간인스타그램(@gwangju_gourmetweek)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식워크숍·미식여행 등 남도 식재료를 직접 다루고 광주의 거리를 걸어보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미식 워크숍’은 3일과 11일 두 차례 열린다.

3일에는 제철 무화과를 활용한 음식을 만들어보는 ‘무화과와 가을사이’를, 11일에는 나주와 곡성에서 재배한 농산물로 비건 요리를 직접 만들어보는 ‘비건 식탁’을 운영한다.

광주의 동네를 걸으며 맛과 문화를 발견하는 ‘미식여행’은 양림동편 ‘근대골목과 비건 한 끼’, 금남로편 ‘원도심 문화와 비건 중식’, 산수동편 ‘푸른길 탐조와 비건 디저트’ 등 3개 코스로 진행된다.

미식워크숍과 미식여행은 ‘광주비건탐식단’ 예약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자에게는 남도 농산물을 기념품으로 제공한다.

남도미식 프리미엄 투어는 ‘산지에서 식탁까지’를 주제로 광주 남도 한 끼, 식재과 나주한상, 나만의 한 끼 여행 등 당일투어 2종과 1박2일투어 1종 등 총 3개 여행상품으로 운영한다.

미식투어는 서울·부산 등 외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며, 허영만 작가의 ‘식객: 맛의 뒤편’ 전시 관람을 공동으로 포함한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전남광주 전문임기제 13명으로 확대

산업·시·청년정책 등 6명 증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장의 정책 결정을 보좌하는 전문임기제 직위가 7개에서 13개로 확대된다.

3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입법예고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따르면 통합시 공무원 정원은 기존 1만1124명에서 1만1178명으로 54명 늘어난다.

이중 시행규칙상 정책보좌 역할을 하는 전문임기제 직위는 기존 7개에서 13개로 늘어난다.

정책총괄수석, 시민주권수석, 사회문화수석, 녹색도시수석, 산업경제수석, 시미래기획수석, 전략홍보수석, 대외협력특보, 대외소통보좌관, 민원협력보좌관, 과학기술보좌관, 청년정책소통관, 청년정책지원관 등 6개 직위를 추가했다.

기존 대외소통특보는 대외협력특보로 명칭을 바꿨다.

전문임기제는 정책결정 보좌나 특정 분야 전문업무를 위해 예산 범위에서 임용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일반 공무원 정원에 대해 운영되는 일반임기제와 달리 시장의 업무를 직접 보좌한다.

현재 임용된 전문임기제는 황풍년 사회문화수석, 이민철 시민주권수석, 윤희철 녹색도시수석, 전락홍보수석, 대외협력특보, 대외소통보좌관, 민원협력보좌관, 과학기술보좌관, 청년정책소통관, 청년정책지원관 등 13개 직위를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두도록 했다.

앞서 통합시는 정책총괄·시민주권·사회문화·녹색도시수석과 대외소통보좌관·대외소통특보 등 6개 직위를 전문임기제로 규정했다가 지난 14일 전략홍보수석을

추가에 모두 7개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가 이를 더 확대했다.

첫 조직개편안이 통과된 뒤 마련한 이번 후속 시행규칙에서 산업경제수석·시미래기획수석·민원협력보좌관·과학기술보좌관·청년정책소통관·청년정책지원관 등 6개 직위를 추가했다.

기존 대외소통특보는 대외협력특보로 명칭을 바꿨다.

전문임기제는 정책결정 보좌나 특정 분야 전문업무를 위해 예산 범위에서 임용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일반 공무원 정원에 대해 운영되는 일반임기제와 달리 시장의 업무를 직접 보좌한다.

현재 임용된 전문임기제는 황풍년 사회문화수석, 이민철 시민주권수석, 윤희철 녹색도시수석, 전락홍보수석, 대외협력특보, 대외소통보좌관, 민원협력보좌관, 과학기술보좌관, 청년정책소통관, 청년정책지원관 등 모두 4명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 18일 시의회 의결을 거쳐지지 않고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공포 등의 절차에 따라 시행된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